

정부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다가 일부 산업계의 반대에 부딪쳐서 2015년으로 그 시행시기를 늦춘 바가 있다. 그나마 2015년에 시행하기로 한 배출권거래제도도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어 법률화되지 못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도와 관련하여 여러 논란이 있으나, 이러한 논의들 중에는 부정확한 개념과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여 정부 정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시기가 되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해야 하는가?

김 승 도 | 한림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교수

한 택 환 | 서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서울대학교(해양학),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USA(환경공학 석사), Univ. of Wisconsin-Madison, USA(환경공학 박사)
환경부 온실가스 인증위원회 위원, 대통령 사회정책수석실(환경분야) 정책자문위원, 기후변화연구센터 센터장,
기후변화협약 온실가스 배출통계 국가보고서 검토 팀장, 국립농업과학원 겸임연구관, 현대제철 사외이사, 기후변화학회 이사 등 활동
tel. 033-248-3285 | sdkim@hallym.ac.kr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무엇인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배출원의 배출허용총량에 기초하여 온실가스 배출권리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유연성 있는 감축 수단이다. 대기오염물질의 비용 효과적 인 감축수단으로 이미 검증된 제도로서 온실가스 감축에 활용하기 위해 최근 도입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오해는 무엇인가?

최근 정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입법 과정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산업계에 설명하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의 반대로 인하여 마치 이 제도가 산업계에 반하는 제도처럼 비쳐지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오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산업계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겠는가?

둘째, 좋지 않은 제도이므로 다른 국가들은 안 하는데 왜
우리만 하려고 하는가?

셋째,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 감축이 가능하겠는가?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도입 적용되면서 온실가스 다배출업체(관리업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직접 감축이 필요하나, 많은 경우 감축이 용이하지 않아 직접 감축은 고비용이 될 개연성이 높다. 그러므로 직접 감축비용보다 저렴하게 외부에서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의무감축량을 달성할 수가 있다.

EU 31개국과 뉴질랜드는 이미 배출권거래제를 도입 운영 중이고, 호주는 올해 7월 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미국과 일본도 국가 단위에서 시행하지는 않고 있으나 지역 단위 거래제를 도입하고 있다. 중국, 인도 등도 지역단위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2015년부터 국가단위

거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미국과 일본도 정치 상황이 변경되면 단기간에 전국 단위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배출권거래제는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시기의 문제이나 전 세계적으로 정착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저렴한 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므로 거래제가 정착되면 관리업체는 자체 설비에서의 직접 감축보다 배출권거래를 통한 간접 감축을 선호할 개연성이 높아 오히려 거래제를 통한 감축량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왜 필요한가?

우선 배출권거래제도는 일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최소의 저감비용이 발생하는 제도라는 점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배출권거래제도 하에서 감축 비용이 큰 업체는 배출권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감축 비용이 낮은 업체는 배출권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게 되는 소위 모두 윈-윈(Win-Win)하는 제도이다.

최근 녹색성장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는 현재 시행 중인 목표관리제(직접 감축)에 비해서 국민경제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44~68% 절감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한다.

산업계는 단기적으로 안목으로 배출권거래제를 반대하나, 미래 사회는 저탄소 에너지 고효율 경제체제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녹색기술 및 산업의 육성은 필연적이다.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적용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녹색기술이 활성화되고 미래 녹색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어떻게 추진해야 바람직한가?

산업계가 배출권거래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우선 실질적인 감축 목표와 할당방식이 불확실하다. 배출권거래제도가 모든 구성원에게 이익이라는 것은 감축 목표와 할당이 주어진 상황에서

이다. 만약 어떤 구성원이 배출권거래를 반대함으로써 다른 정책수단을 정부가 택하도록 만들 수 있고, 이 다른 정책수단이 유리한 할당방식 등을 통하여 그 구성원에게 배출권거래제도 하의 감축 비용 절감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면, 이 구성원은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정부의 할 일은 앞으로 이러한 유인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도를 실시하되 감축 목표 미준수 시의 벌칙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도를 실시하지 않을 때 실시 가능한 제도(목표관리제나 탄소세 등)의 정책 내용도 상세하게 알려줘야 한다. 다른 제도가 배출권거래제 보다 훨씬 고비용임을 인식토록 하여 배출권거래제가 최선임을 인지시켜야 한다.

배출권거래제도를 실시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배출권거래제도야말로 이른바 녹색성장의 선결 조건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녹색성장을 주창하면서도 배출권거래가 지연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등 경제상황 때문이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배출권거래제도를 연기할 것이 아니라 감축 목표를 하향 조정하더라도 배출권거래는 실시하는 것이 정답이었다. 배출권거래가 실시되어야 각종 온실가스 감축 녹색 사업들의 경제성이 확보되고 "탄소 시장"의 운영방식을 습득하여 새로운 사업기회들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